

— 강제명(공무원단기학교 행정학 전임)

0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조정·협의하기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다음 중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은?

- ① 기획재정부장관
- ② 안전과 관련된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 ③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④ 법제처장

[해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둔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와 달리 신청에 의한 조정만 가능하며, 직무이행명령과 대집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원은 기재부장관·행자부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 안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으로 구성한다.

③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아닌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다.

[정답] ③

02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및 채권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해설] ② 자치단체장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②

03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② 인사위원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의결·집행기관이다.
- ③ 지방의회의 현직 의원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으나, 정당의 당원은 인사위원이 될 수 있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 [해설] ① 인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부자치단체장시장(광역은 국가공무원인 부자치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 또는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 ② 인사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며, 인사에 대한 사전심의와 필요한 기준의 사전의결 기능과 임용시험의 실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 ③ 인사위원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의 조교수 이상 교수나 초·중·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 위촉한다. 단, 정당의 당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위촉할 수 없다. 정당의 당원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행정위원회의 위원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 | |
|----|---|
| 설치 | 임용권자별로 설치(시도는 필요한 경우 제1 및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위원 | 정수 :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지방공무원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 1/2이상으로 구성 ※ 정당의 당원, 지방의회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임기 : 3년(1회에 한해서 연임가능) |
| 기관 | 위원장(1인) : 부자치단체장시장(광역은 국가공무원인 부자치단체장) 부위원장(1인) :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 간사와 서기 :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

[정답] ①

0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1991년에 시행된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이 동시에 선출되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형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가 분리된 기관분리형이다.
- ③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주민발의·주민소환제도가 채택되지 않았다.
- ④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이 2계층인 중층제이다.

[해설] ① 1991년에는 민주화 이후 최초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1995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장에 대한 직선제가 도입되었고, 1998년 선거에서 장과 의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였다.

| 구 분 | 지방의회 | 자치단체장 | 비고 |
|----------------|------|----------------|---|
| 1949년 자치법 제정 | 주민직선 | 기초(간선), 광역(임명) | 56년 2차 지방선거에서 기초長은 직선 58년 개정법은 기초/광역長 모두 임명제 |
| 1960.11(5차개정) | 주민직선 | 주민직선 | 3차 지방선거 |
| 3-5공화국 | 의회해산 | 국가 임명제 | 61년 의회해산. 상급기관이 의회권한 대행 |
| 1988.4(7차 개정) | 주민직선 | 직선(경과조치 : 임명제) | 지방선거 미실시 |
| 1990.12(9차 개정) | 주민직선 | 직선(경과조치 : 임명제) | 4차 지방선거(91년 4월 기초, 7월 광역) |
| 1995.3(12차 개정) | 주민직선 | 직선(경과조치 : 임명제) | 1기 동시지방선거(1995.6.27.) |
| 1995.6 | 주민직선 | 주민직선 | 2기 동시지방선거(1998.6.4.) |

- ② 한국은 기관대립(분리)형 중에서 직선형을 택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강시장 약의회형에 속한다. 맞는 지문이다.
- ③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단 시행은 개별법에 위임하고 있다.
- ④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과 자치구를 두지 않는다. 즉 단층제이다.

[정답] ②

05 지방자치권의 근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고유권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주어진다고 본다.
- ②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창조물로 보는 준독립설은 고유권설의 하나이다.
- ③ 전래권설에서는 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본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정치적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순수탁설은 전래권설의 하나이다.

[해설] 자치권은 국가 주권 아래의 권리이며, 국법에 의해 수여된 권리이자, 일정 범위 안에서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이해된다(한국의 통설인 제도적 보장설). 자치권에 대해 고유권설과 전래권설, 제도적 보장설이 있다.

| | |
|----------------|--|
| 고유권설 (지방권설) | 지방정부는 국가성립 이전에 형성된 사회적 공동체로 자치권은 전국가적인 자연권이라 보는 것이다. 자치단체가 본래 향유하는 자신의 고유한 기본적 권리로 본다. 자연법 사상과 프랑스 혁명기의 지방권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 |
| 전래권설 (국권설) | 자치단체가 갖는 자치권은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즉, 국가의 통치권 일부가 법률에 의해 위임된 것이라는 것이다. |
| 제도적 보장설 | 자자치권은 국가의 통치권에 의해 위임된 것이지만, 헌법에 의해 특별히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는 것이다. 입법자는 지방자치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할 수 있으나, 제도를 폐지하거나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할 수 없다고 본다. |

①②는 전래권설의 입장, ③은 고유권설의 입장이다.

[정답] ④

06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예산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 ㄴ. 중앙 정부의 입법에 의해 처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었다.
- ㄷ. 주민의 참여 절차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 ㄹ.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충돌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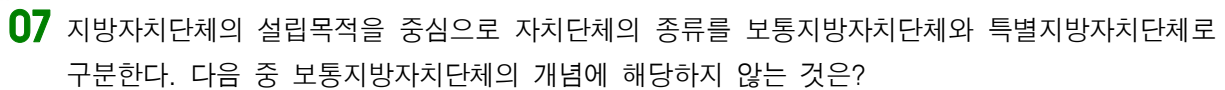
[해설] 브라질의 포토 알레그리 市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이후 전세계로 확산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순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자 거버넌스의 한 형태로, 참여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한 제도이다.

(i) 과정적 측면에서 보면 개방성 공동체성 평등성 민주성 투명성 담론지향성 등을 지향한다. 누구나 평등하게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참여를 지향한다. (ii) 결과적 측면에서는 대응성 효율성 형평성을 지향한다.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효율적이고 공평한 예산의 편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ㄴ. 광주광역시 북구(2003)에서 도입된 이후 울산광역시 동구(2004), 울산광역시 북구(2005), 전라북도(2006) 등으로 확산된 이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도입이 의무화되었다.

ㄷ.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이 아닌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답] ②



10 「지방자치법」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규칙으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해설] ① 규칙이 아닌 조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정답] ①

11 우리나라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 ②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 ④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해설] 특별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에서 부동산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제한 금액의 3%를 재원으로 한다. 특정한 현안수요에 대해 교부하며,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 : 특별교부세 재원의 40%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 등 : 특별교부세 재원의 50%

국가적 장려사업 등에 대한 재정수요 : 10%

- ③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대해 행자부 장관이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행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행자부장관은 특별교부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②

12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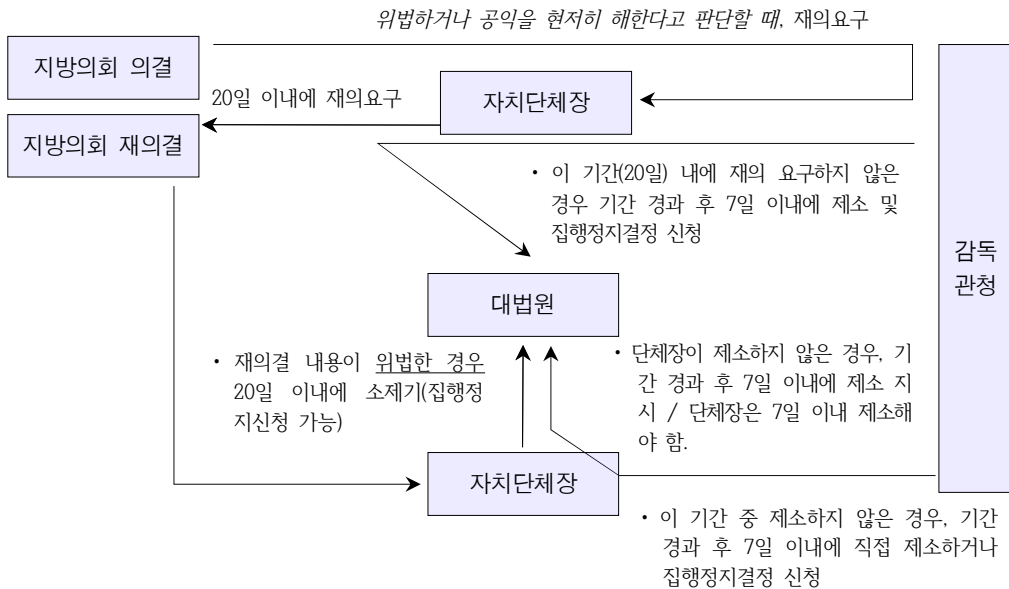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지방의회에서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①④ 자치단체장은 조례제정에 대한 재의요구 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 |
|-----------------|--|
| 일반적 거부권 | • 월권이나 법령 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한 때 |
| 경비의결에 대한 재의 | •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을 때 • 의무부담경비나 응급복구비를 삭감한 때 |
| 조례제정에 대한 재의 | • 이익이 있을 때 |
| 감독관청 요청으로 인한 재의 | • 법령 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한 때 |

② 재의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되며, ③ 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③

13 「지방자치법」상 보조기관과 하부 및 소속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자치구가 아닌 구에 읍, 면, 동을 직속기관으로 둘 수 있다.
- ②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인구와 관계 없이 2명의 부단체장을 둔다.
- ③ 서울특별시는 3명의 범위 내에서 부단체장을 둔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관으로 소방 및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기관은 다음과 같다.

| | |
|--------|----------------------------------|
| 보조기관 | • 부자치단체장, 소속 공무원 |
| 소속행정기관 | •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자문기관 |
| 하부행정기관 | • 읍·면·동의 장 |
| 행정기구 | • 국·과·실·본부, 담당관 |
| 외곽조직 | • 공사, 공익법인, 영리법인, 제3섹터 등 |

①은 하부행정기관이며, ④는 소속행정기관 중 직속기관이다.

②③ 광역자치단체의 부자치단체장은 2명을 두되, 서울특별시와 인구 800만명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는 3명의 범위 내에서 부단체장을 둔다.

[정답] ③

1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지방정부 예산규모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 ② 지방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 ③ 일반재원의 비중이 커지면 지출 선택범위가 넓어져 재정운영의 자주성과 탄력성이 커진다.
- ④ 재정자립도가 같으면 그 두 자치단체 간 재정규모도 같다고 할 수 있다.

[해설]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단, 지방재정법은 지방채를 제외한 수입 총액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파악한다. 그러나, 재정규모와 세출구조를 간과하고 있으며, 일반재원에 속하는 지방교부세 효과를 역산정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④ 재정자립도는 전체 수입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재정규모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

[정답] ④

15 지방의회의 소집과 회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례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 ② 현행법상 휴회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 ③ 정례회의 회기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해설] 회기는 지방의회 의결로 결정하며,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조례로 결정한다.

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한다.

| | |
|-----|---|
| 정례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년2회(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례로). 광역은 40일, 기초는 35일 • 1차 정례회 : 결산승인, 기타 지방의회 부의안건(6·7월개최. 17년부터는 5·6월) • 2차 정례회 : 예산안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 부의안건(11·12월 개최) |
| 임사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원집회는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지방의회 사무처장이 소집 • 일반적 임시회는 단체장,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소집(3일전 공고) |

[정답] ①

16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2기에 한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④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해설] ② 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반면 지방의회 의원의 연임제한은 없다.

① 자치단체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 폐치분합으로 자치단체장의 직을 상실할 때 퇴직하며,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사임통지서)으로 알려야 하며,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임된다.

[정답] ②

17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특별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 ②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운영에 대하여는 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 ③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정부의 직할로 두지 않는다.
- ④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등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해설] 지방자치법은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에서 ①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조정, 그리고 ② 서울시와 세종시, 제주시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지위·조직 및 운영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④ 법률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서울특별시, 세종시, 제주도는 정부 직할로 설치한다.

[정답] ④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으로는 소속공무원, 부시장, 부지사, 구청장, 동장, 면장 등이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소환투표에 의해 소환이 확정된 경우 그 직을 상실하나, 그 보궐선거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위탁할 수 있다.

[해설] ① 직무이행명령은 부작위에 대해 내리는 것이며,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정지권을 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으로는 소속공무원, 부시장, 부지사, 구청장, 동장, 면장은 하부행정기관이다.

③ 주민소환투표에 의해 소환이 확정된 경우 그 직을 상실하며, 그 보궐선거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만약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면 주민소환의 의미가 없게 된다.

[정답] ④

1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설치, 분리, 통합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폐지, 설치, 분리, 통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통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해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자치단체 내부 문제는 조례로 정한다. 즉, 행정구와 읍·면·동의 명칭 변경이나 폐지통합은 조례로 정한다.

④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정답] ①

2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아닌 것은?

- ① 예산의 편성·집행, 공유재산관리
- ② 도서관, 운동장, 광장, 체육관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③ 물가정책·근로기준 등의 운영
- ④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해설] ③ 물가정책·근로기준 등의 운영은 국가사무에 속한다. 나머지는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에 속한다. 자치법 상 예시된 국가사무는 다음과 같다.

국가사무에 대한 자치법의 예시

-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정답] ③